

www.kipf.re.kr

공공기관 Brief

2025 SPRING Vol. 19

기획특집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기관 박람회

지식재산 진흥 및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경제』의 새로운 이름
『공공기관 Brief』

『공공경제』는 지난 5년간 독자 여러분께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과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 발전과 함께하는 매거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독자분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거진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공공기관 Brief』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Brief』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례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신뢰받는 정부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부터, 도로·철도·공항, 그리고 이 외에도 주택·금융·의료·안전 등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이렇게 매일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곧 정부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국민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비대화된 조직을 정리해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수·인사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더불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과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에 34개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안내, 교육 기부 확대 등의 사례는 국민 일상에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편의성 증진을 넘어,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보다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에는 지난해 채용 실적보다 확대한 2.4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1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을 확대해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2025년 총 66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그중 57%를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분야 등 공공기관 투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경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야말로 신뢰받는 정부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혁신이 모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준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CONTENTS

공공기관 Brief

2025 SPRING Vol. 19

기획특집



발행인 이 영 KIPF 원장
편집인 이남국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조혜진 KIPF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김은정, 소병욱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 사00017)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 화 044-414-2457
이메일 soe@kipf.re.kr
주 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 Brief』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기관 Brief』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8 전문가VIEW I

AI 시대,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과제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

11 전문가VIEW II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15 Round Table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이번 「공공기관 Brief」
Vol. 19는 어떠셨나요?

「공공기관 Brief」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TALK



26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28 Trend Focus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독일 기업은 왜 가족친화경영의 길을 가는가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32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중립성 논의 동향
이기를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40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SI와 저작권: 주요 쟁점과 국제적 대응 방향
장성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팀장

44 혁신이야기 I_한전KPS
'원전의 수출산업화' 앞당기는 루마니아·체코 수주 달성

46 혁신이야기 II_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 연구 역량은 UP! 행정 부담은 DOWN!
국민을 위한 연구지원 플랫폼 구현

50 CEO인터뷰 I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56 CEO인터뷰 II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수목원·정원의 미래를 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62 공공기관 박람회
지식재산 진흥·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손화정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원

66 잡(JOB)담 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팀 과장

70 잡(JOB)담 II
시청자미디어재단
배효순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지원부 부장

74 나의 취업성공기 I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석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성비축기지 주임

77 나의 취업성공기 II
스무 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
양나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재경영팀 직원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문가VIEW’에서는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주요 과제와 쟁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Round Table’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다.

전문가VIEW I

AI 시대,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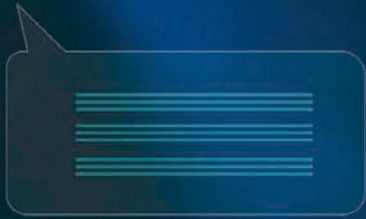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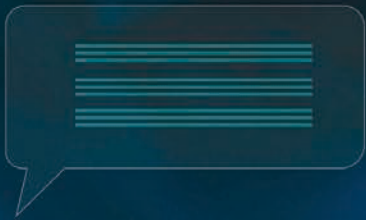
전문가VIEW II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Round Table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AI 시대,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과제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



패러다임 전환과 AI 시대의 도래

2016년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간의 바둑 대결이 불러온 충격은 대단했다. 인간의 고유영역이라 생각했던 바둑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1940년대 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AI는 수십 년간 유행기(AI Boom)와 암흑기(AI Winter)를 반복하면서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었다. 알파고가 드디어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알파고 충격을 넘어 2022년 등장한 챗GPT가 준 충격은 가히 쓰나미급이었다. 드디어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기계,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기계가 등장한 것이다. 챗GPT는 알파고처럼 한 가지만 잘하는 약인공지능(ANI)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두루두루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일반인공지능(AGI)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논리적 추론과 계산에 특화된 기존의 AI와 달리 챗GPT는 무엇이든 묻는 말에 대답해 주고,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 내며, 심지어 그럴듯한 거짓말까지 꾸며내는 생성형 AI라는 점이다.

이제 AI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빅뱅 파괴(bigbang disruption)를 일으키고 있다. AI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4의 물결(wave)로서, 훗날 인류 역사는 AI 이전과 AI 이후로 구분될 수도 있다.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혁신 방향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공공서비스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얼리어답

티(early adaptor)'로서 최신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정전산화, 행정정보화,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AI 정부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이지만 기존 전자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행정 주체가 사람(공무원)에서 기계(AI)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기계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자동화(automation) 단계이다. 단순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기계가 처리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대표적이다. 재량이나 판단이 필요 없어 인간이 하나, 기계가 하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계가 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동화는 공무원들을 단순반복적이며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소모적이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시민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 전자정부 초기부터 적극 추진 중인 자동화는 AI와 함께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챗봇을 활용한 민원전화 응대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자료정리, 문서 작성, 공문 기안, 알림 메시지 발송 등 많은 자잘한 업무를 AI가 처리해 준다.

둘째는 기계가 사람 일을 지원하는 증강(augmentation)이다. 복잡하고 어려워 지식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업무에 적용된다. 복잡하고 사악한(wicked) 정책 문제나 전략적 의사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 해석, 유형화, 대안 탐색 및 평가 등을 AI가 대신해 준다.

일의 주도권과 최종 결정권은 사람이 가지며, 기계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도와주거나 사람에게 앞서 초벌 작업을 해준다. AI가 조수, 정책분석가, 보좌관, 비서, 부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과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람이 질문하고 AI가 대답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문제해결 설루션을 찾아가는 업무처리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모든 공무원 각자에게 유능하고 충실한 맞춤형 AI 비서 또는 보좌관을 붙이면 업무처리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높일 수 있다.

셋째는 기계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자율화(autonomy)이다. AI가 인간과 맞먹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AI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고, AI 의사가 진료와 처방까지 하며, AI 재판관이 판결까지 하고, AI 심사관이 특히 심사, 가석방 심사를 한다.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AI가 대출 심사, 신입사원 선발, 투자 결정, 인사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단계는 시범사업 정도에 머물러 있다. 기술의 문제보다는 법제도 그리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을 기계가 할 수 있는가,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계의 결정을 시민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까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주요 과제와 쟁점

AI 정부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가 중요하다. 특히 ‘자동화’와 ‘증강’은 당연한 현실이며, ‘자율화’도 시기의 문제일 뿐 분명히 다가온다. 그럼, AI 기반 공공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해당 서비스가 AI로 전환하기에 적합한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법제도적 걸림돌이나 규제 허들은 없는지, AI 개발·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기계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해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정부와 행정 업무 모두에 AI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AI 적용 업무를 선별해야 한다. 단순반복적이고 소모적이어서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업무부터 발굴해 자동화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을 잡무에서 해방시켜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도 줄이고 품질도 높여야 한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공무원과 AI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 부정수급 탐지와 사각지대 발굴, 범죄 예방·대응, 재난 예방·대응·복구, 전염병 예측·대응, 실업·경기부양 대책 등 무수히 많은 과제에서 사람과 AI 간의 분업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업무별로 특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해서 개인 보좌관 또는 개인 비서처럼 활용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아니라 해당 부처, 해당 업무, 해당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AI가 필요하다. 특히 심사, 산림행정, 보훈, 복지서비스, 전염병 대응, 기상예보 등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이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AI를 개발하고 훈련할 충분한 양의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AI 성능이 달라진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없다. 다섯째,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AI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법적 근거, 문제 발생 시의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등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법 등 각종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AI가 유발하는 차별, 실수, 오류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개방성, 설명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여섯째,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소외계층의 AI 이해력(AI literacy) 함양과 AI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AI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게 정부 역할, 공공서비스의 개념, 제공 주체, 제공 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과 2년 전에 소시에테 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이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공매도 금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지만,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 때문에 전면 금지가 결정됐고, 올해 3월 31일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빅테크기업의 비대면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거래는 금융소비자의 편리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면에는 제판분리(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에 따른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소재 불분명, 신유형의 위험 증대라는 문제도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2024년 티메프 사태 등 선불전자지급업자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가능성이 있다. 금융 관련 규제가 기관 그리고 열거주의로 정비된 상태에서, 신종 서비스 출현은 규제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존 금융업자와 빅테크 간 규제 차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성화된 가계부채로 불가피해진 연체 채

무자에 대한 과잉추심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가 모집·계약 단계에 치중하다 보니 사후에 발생하는 연체 채무는 보호 대상으로서 배려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을 점검해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상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교섭력과 정보력'에서 열위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인 금융회사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상품이 일반상품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대출, 보험, 펀드 계약 같은 금융상품 거래는 일반상품 구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계약 관계이다. 둘째, 금융상품의 경우 구매 시점에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 금융회사들이 내리는 결정이 금융상품의 성과(펀드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비대칭과 신뢰재(credential goods)라는 특성 때문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특성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발생한다. ① 규모의 경제라는 금융산업의 특성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다 협상력과 정보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② 감독당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진입과 관련한 인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즉, 제도적으로 금융업자의 독과점을 보장한다. ③ 개입 시에도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 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별도의 법익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제들

이러한 금융상품의 속성, 금융산업의 작동 원리 그리고 당국의 감독 방식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보기에 다음 4가지 방식이다.

첫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과정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를 보호한다. 지난해 당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개선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후 배상과 책임자 특정에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이다. 통상 건전성 관리는 연체율이나 충당금 적립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에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영업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정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 발생과 관련한 사전·사후

그림 1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



구제책은 같은 법에서 다루고 있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이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4가지 기재가 모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을 4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보호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구매 시점의 금융소비자를 보호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SG 사태처럼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이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대출 차주가 사후 연체 시 과잉추심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은 긍정적이지만, 연체채권 매각 시 초래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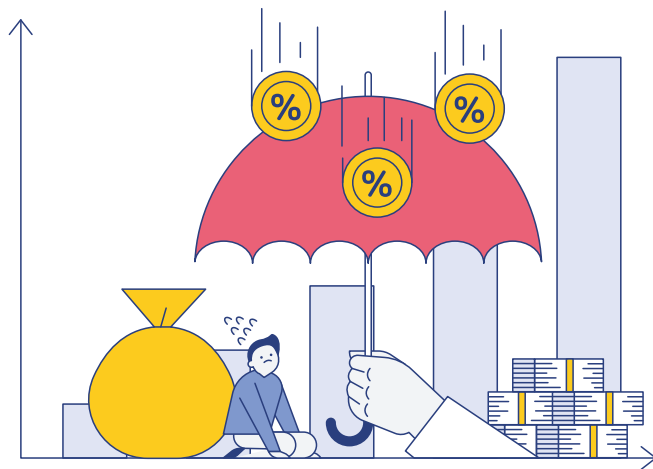
둘째, 금융상품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개선 사항들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강화이다. 이는 개인들의 협상력, 그리고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 같은 관련 기관의 자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상품 계약이 장기간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조·판매사에 대한 충실의무 같은 원칙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인 과잉대부 금지 원칙이라든지, 적격투자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 선별 기준 운용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작성·운용토록 하는 방식을 제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 인프라와 문지기 (gatekeeper)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IPO)와 더불어 상장폐지 기능 강화, 외부 감사 및 공시 활성화, 신용평가 기능 강화 등이다. 이 방안들은 후술(後述)할 내용과 비교하면 사전적 보호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독과점 구조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초과이익의 사회환원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Fund) 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히 기술해 본다. ① 신속상정 제도(Fast-Track) 도입, ②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③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④ 입증책임 전환이 있다.

먼저 신속상정 제도란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에 따라 일부 분쟁은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조정 불성립 시 바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소액 분쟁조정 사건시 분조위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하자는 방안이 두 번째 안이다.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는 별도의 분쟁조정기구 설립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원칙준수에 위반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업자가 담당케 하는 방식이다. 요는 분쟁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현재보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가 되풀이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사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수취한 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확산과 관련해 금융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온라인거래 시 설명의무의 허술한 구멍(루프홀)에 대한 개선책,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완책 등 정비 마련에 대한 검토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이윤규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은 튼튼한 국가 보건의료 체계이며, 특히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2000년 「공공보건의료법」 제정과 함께 다양한 보건 및 건강 증진 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되는 의료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공공의료기관 부족 등 여러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 지역 의료서비스 품질 문제 등 민간과 공공 의료 간 격차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각 지역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온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와 만성적인 지역 병원의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며,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은정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정의를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은 비영리재단이며 공익법인으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의료를 기능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한다는 의미는 필수 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



일자
2025년 2월 19일(수)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사회
이윤규

토론자
강은정, 오영호, 이경란, 오유미

정리
강석훈, 이가을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공과 민간 의료기관 및 인력을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 보건의로 서비스를 정의하고, 지역별 필수 보건의로 서비스의 수요를 추계해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역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해 교통, 경제, 문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영호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 확대, 의료 인력 확보,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증설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필수 의료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며 응급·중증·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 의료진의 장기간 정착을 위해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고, 주거·연구·가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확대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예산 확대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을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윤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전체 고령자 가구 중 약 38%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쉬는 청년 및 고립·은둔형 청년의 증가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약 27.3명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전 국민의 높은 우울증과 자살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영호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연령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이윤규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실장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

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이 주요 문제로 작용하므로,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문형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면, 청년층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과 사회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생활비 지원,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상담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해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고, 심리적 위기 대응을 위한 심리 응급처치 교육을 도입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조기 상담과 치료를 장려하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정신건강 돌봄센터 운영, 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확대해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과 지속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 개인이 협력해 포괄적인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은정 정신건강 또는 자살 문제가 국가 의제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울 및 자살 시도자 증가에 비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및 인력의 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한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던 일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획기적인 예산 증대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살률을 성공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차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령기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 활동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문화, 여가, 체육 등 여러 분야가 자살예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각자 역할을 찾고 각자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윤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경험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질병과 전염병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와 같은 국가 재난적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

료 체계에 원격의료, AI 건강 모니터링,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공공의료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의료 체계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은정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은정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특성상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신종 전염병을 원천 예방하려는 노력보다는 조기에 발견하는 감시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전염병을 관리할 때 필요한 물품과 인력의 수요,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의 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상시 이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필요시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디지털 활용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필수 의료를 위한 병상, 의약품, 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 DB를 구축하고 수요 발생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건강 관련 도시환경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건강환경 데이터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디지털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의료 취약지역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전담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감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와 AI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불균형 해소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이윤규 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 보호 강화 분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민원 서비스 개선’,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

내역서 발급 전산화' 같은 대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기관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 증진 관련한 공공서비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사업 중 하나로 「전자정부법」 시행과 더불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같은 제증명서 20종 등을 정부·공공·민간기관에 마이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피부양자 관리 업무'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다제약물 관리 등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국민이 이용한 전체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량의 53.7%¹⁾가 공단 자료 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보험료 부과확인내역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전자증명서 포함)에서 부과자료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중요정보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원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그 외에 일차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대사증후군 관리, 질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검진데이터, 진료데이터, 자격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나의 건강나이' 및 질병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모든 건강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모아'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와 가족 간 건강정보 공유 기능, 유선상담 기피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챗봇상담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확대와 건강보험료 바우처 지원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건강백세운동교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 이용량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은 NHIS-CAMP(적정진료 추진단)를 구성해 전 국민의 진료·검사 및 처치·투약 자료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CT 같은 특수 의료장비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하고 개인별 검사(CT)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건강정보를 지속 발굴·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윤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1) 2024년 전체 마이데이터 제공량 16억건 중 공단 마이데이터 제공량은 8.5억건으로 전체 제공기관 중 1위임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검진 시행률과 암 조기 발견율, 세계 최고 수준인 중증 치료 역량 등 비약적인 의료서비스 및 품질 발전과 다양한 국가 보건의로 정책 등을 통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3년 83.5세로, 약 21년 늘어났습니다. OECD와 WHO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기대수명이 긴 나라로 꼽힙니다.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던 제도가 있다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중앙정부의 건강정책을 기획·개발하고, 약 3,5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건강 증진 사업 지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제5차 계획(2021~2030년)이 추진 중이고, 2026년 1월에 제6차 계획(2026~2030년)이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 원은 제5차 계획의 개선점과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최종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건강수명 산출뿐 아니라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개발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 예방, 구강보건 등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세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2021년 기준 83.6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70.5세입니다. 즉, 국민 대부분이 80살 넘게 사는 동안 10년 정도는 아프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원은 다양한 건강 증진 정책과 사업을 통해 10년이라는 건강 격차를 줄여서, 국민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수명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 등을 분석해 근거 중심의 건강 정책 추진을 지향합니다. 건강도시를 통해 건강 조성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이 지근거리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연, 음주 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 관리 등 총 13개 사업에 관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건강도시는 현재 10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원이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등 모든 지자체가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규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향후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지, 전문가 네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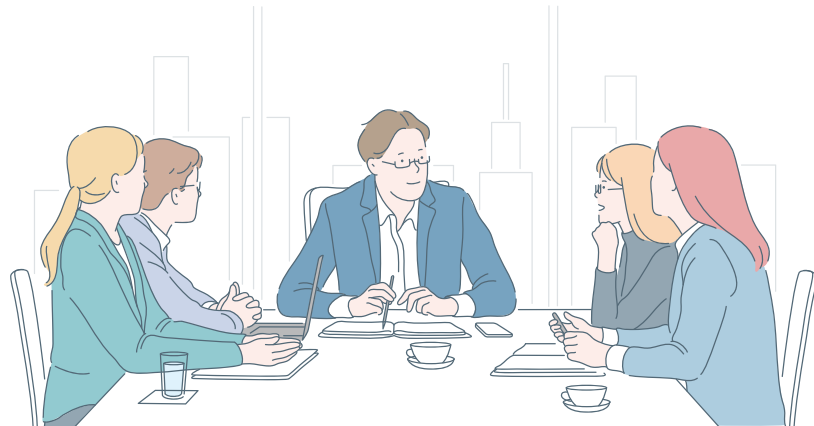
강은정 먼저,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교육부의 RISE 사업처럼, 광역 지자체에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고 광역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 자율성과 통합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결국은 지역의 의료 문제를 조금 더 지근거리에서 해결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여러 부문이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노력해야 국민 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히 보건 담당 기관이 지역 다른 부문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민간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영호 공공의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민간 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제공, 재난·재해 대응, 의료 취약지 지원 등 국가적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를 제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의료공급 체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과 현대화,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예약 및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조기 경보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견제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결국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응급·소아·중증질환자 등 필수 의료 중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의료 현장 상황 등 국가 차원의 의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 중인 '보건의료 인력 통합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의료 인력 수급의 분

석·평가를 강화하면서, 지역별로 적정한 의료가 공급되고 국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원·병상 지속 확대와 적정보상을 위한 수가 개선, 적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단은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을 디지털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전면 온라인화(기존 157종 + 43종 확대)해 모바일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AI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 관점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유미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 또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얼마나 더 역할을 하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에 얼마나 더 정책과 지원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양극화 해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고,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소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확장한다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에게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별점테러, 자영업자에겐 재앙입니다.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별점테러,
장난성 리뷰와 협박성 리뷰는 삼가주세요.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이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형 AI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쟁점이 되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독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중립성의 개념과 등장 배경, 주요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AI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국제적 대응방향을 소개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는 한전KPS의 루마니아·체코 원전사업 수주 사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플랫폼 구현 및 공유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독일 기업은 왜 가족친화경영의 길을 가는가 –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중립성 논의 동향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AI와 저작권: 주요 쟁점과 국제적 대응 방향

혁신이야기

한전KPS / 한국연구재단





정책동향 소식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가 2024년 12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운용지침은 ❶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❷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 있게 추진, 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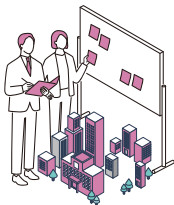
2025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습니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저임금·고임금 기관, 무기계약직 기준 저임금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2023년도에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 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었으나, 가정친화 문화장려를 위해 2025년도부터는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 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 시 제외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21일에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한 총 331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2호)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을 감안해, 정원이 늘거나 줄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정원이 감소한 대한석탄 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원이 증가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에 통합공시(「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 고객만족도조사(「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 등의 의무가 부여돼 해당 기관의 운영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주요 공공기관¹⁾이 1월부터 66조원의 투자 집행을 적극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투자 목표의 57%인 37.6조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 집행과 면밀한 집행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투자 목표(66.0조원)는 지난해 목표(63.5조원)보다 2.5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 계획의 57% 수준인 37.6조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34.9조원)보다 2.7조원 많아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NH)가 주택공급 사업으로 21.6조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9조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2조원을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채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3조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주 투자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일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투자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1) 주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독일 기업은 왜 가족친화경영의 길을 가는가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독일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나치 시대 인구정책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인해 출산율·출생률을 높이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앞장서는 분위기는 쉽게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계가 나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독일 사회가 마주할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독일 기업은 왜 저출산 대응에 앞장서게 됐을까?

저출산 현상과 독일 기업의 변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독일병(German Sickness)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고 동독 지역에서는 20%를 넘어가는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 그런데 2005년 시작한 하르츠 개혁(Hartz-Reform)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500만명을 넘어섰던 실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berufliche Ausbildung)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Fachkraft)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는 어떤 수준의 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2~3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장기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극심한 저출산 양상이 독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가 2000년대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찾아 노동자가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아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의 길을 선택했다.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주요 전략으로 가족친화(Familienfreundlichkeit)를 주목했다. 가족친화 전략을 통해 우선, 경력을 단절하고 집에 머무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2014년 당시 취업 여성의 거의 절반가량인 45%가 양육과 돌봄을 이유로 주당 18.6시간의 노동만 하고 있었다. 전일제 근무 시간 기준이 주당 38.5시간임을 고려하면 그나마 취업 활동을 하는 여성인력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지만, 여성이 돌봄을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이 엄마의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았다. 고학력 여성, 전문 노동력을 보유한 여성이 취업과 가사·돌봄 노동의 이중 부담 때문에 임신·출산 이후 경력을 단절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정책상 손실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독일 기업이 택한 가족친화경영의 길은 어떠한가?

가족친화기업의 확대

2004년 독일 연방상공회의소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훈련 비용 등 인사관리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 노동력 기반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가족친화경영을 주도하

기 시작했다. 연방상공회의소가 주도해 ‘기업 네트워크 ‘성공 요소로서 가족(Das Unternehmensnetzwerk ‘Erfolgsfaktor Familie)’(이하 ‘네트워크’)을 출범시켰다. 이 네트워크에는 연방사용자협회(Bundesverband der Arbeitsgeber: BDA), 독일연방산업협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 – Startseite: BDI), 독일기술자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ZDH) 등 경제단체와 더불어 독일노동조합연합회(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도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해 가족친화경영을 독일 경제의 대표 상품(Markenzeichen)으로 만들고 있다. 독일 전국에 구축된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지역가족연대(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와 협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네트워크의 광폭 행보가 갖는 특징은 개방성이다. 한국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이 되려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가족친화기업으로 변화를 우선 시도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인증 기준은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 도전을 포기하거나, 가족친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의 네트워크는 가족친화경영 자체에 관심만 있다면 모든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연방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이 되려면 직업훈련으로서 이중체계(das Duale System)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나 가입 비용이 없다. 가족친화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가족친화인증 지표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가족친화인증 사업은 직업과 가족(berufundfamilie, <https://www.berufundfamilie.de>)이라는 민간 컨설

팅 회사에서 따로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네트워크에 가입한 기업은 8,600여개다. 네트워크에는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은 있으나 가족친화경영이라고 내세울 만한 목록이 없는 기업, 한 가지라도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준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다양한 회원 기업 간 연결을 통해 기업 간 가족친화경영 관련 노하우를 교환하거나 전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기업을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해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가입 기업을 가족친화경영 확대 사업을 위한 일종의 풀(Pool)로서 조직화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홈페이지(<https://www.erfolgsfaktor-familie.de>)와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세미나, 워크숍, 개별 회원 기업 초대 행사(연초) 개최 등 주요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9월 20일에도 베를린에서 연방가족부와 공동으로 ‘기업의 날 - 일 · 가정 양립과 전문 노동력 확보(Unternehmenstag - Vereinbarkeit verbessern, Fachkräfte sichern)’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자인 가족친화기업, 전문 노동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전략 수립, 전문 노동력이 머물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다뤘다.

결론

최근 독일에서는 이른바 ‘민트(MINT)’라고 부르는 수학(Mathematik), 정보학(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 기술(Technik)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사회 쟁점 중 하나다. 민트 영

역의 노동력 부족을 해마다 추계하는 민트 보고서(MINT Report)에 따르면 매년 부족한 노동력 규모는 20~30만명으로, 민트 영역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2040년 정도에는 민트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최대 330만명의 전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전망도 있다. 국가보다도 기업 ·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으로서 자랑할 목록이 아니다. 법 규정이기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수많은 가족친화경영 목록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족친화경영의 대표적 목록이 육아휴직이다. 그만큼 한국은 가족친화경영이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어떤 규모로 나타날지에 대한 경제계 차원의 예측이 필요하다. 만약 이와 관련한 구체적 추계와 개별 기업의 상황이 정리된다면 한국의 많은 기업에게도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에게 주는 선심 · 선물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력 부족 추계부터 시작해 보자. 그리고 개방적인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대 사업을 해보자. 독일 기업들이 먼저 가면서 보여주는 길이다.◎

참고문헌

- 정재훈, 「독일의 저출산 문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민족연구』, 제41호, 2010, pp. 168~198.
- _____,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적 대응과 출산 현상의 변화」, KDI 학예연구 2020-01, 글로벌지식협력단지, 2020.
- 정재훈 · 박은정,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제24집 1호, 2012, pp. 1~31.
- 홍승아 외,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57, 2012.
- berufundfamilie, "index_fachsheets," 2019.
- berufundfamilie, "Broschuere_berufundfamilie," 2024.



기간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하면
월 최대 9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worklife.kr

➔ <25년 확대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중립성 논의 동향

경쟁중립성 원칙은 『201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2015 가이드라인’)에 ‘시장에서의 공기업’ 파트가 신설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5 가이드라인 개정판인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2024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과 높은 수준의 기업 행위 규범 및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Brief』 Vol. 19에서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중립성 개념과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2024년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경쟁중립성 논의와 OECD 경쟁중립성 툴킷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OECD 경쟁중립성 원칙 및 등장 배경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경쟁중립성이란 공기업에 관한 법률과 규제 체계가 공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경쟁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다. 특정 경제적 주체가 부당한 불이익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배제되기 때문이다(박한준 외, 2017). 따라서 경쟁당국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법을 집행해야 하며, 외국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경쟁중립성 원칙하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문중숙 외, 2024).

이러한 이유로 OECD는 2005년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OECD Guidance)’을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 사례집 등에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2015 가이드라인에 ‘시장에서의 공기업’ 파트가 신설되며 경쟁중립성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5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OECD 각료이사회가 ‘정부의 적법한 기업 지원과 반경쟁적 조치의 구별’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중립성을 2019~2020년 장기 논의 주제로 선정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OECD 경쟁위원회 제2작업반에서 경쟁중립성 권고문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투자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2021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경쟁중립성 권고문(Recommendation on competitive neutrality)을 채택했다. 이에 후속하여 OECD 경쟁위원회가 2024년 9월에 경쟁중립성 권고문 이행을 위한 툴킷(Competitive neutrality toolkit)을 마련하고 경쟁중립성 툴킷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그림 1] OECD 경쟁중립성 원칙 등장 배경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경쟁중립성 논의

공기업과 관련한 경쟁중립성 논의는 2015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24년 5월 발표된 2024 가이드라인에서 경쟁중립성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경쟁중립성과 관련한 2015 가이드라인과 2024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원칙을 제시하며,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공평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기업과 정부 간 역할 분리,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법적 절차 보장, 그

리고 시장 규제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재정적 지원이나 특혜가 민간 경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기준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015 가이드라인에서 ‘시장에서의 공기업’ 파트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근거에 따라, 공기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공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때 공평한 경쟁 환경과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국가의 공기업 소유 기능과 공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능(특히, 시장 규제와 관련된 기능) 사이에는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 (B) 공기업 이해관계자와 채권자, 경쟁자 등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법적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C) 공기업이 공공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및 수익 구조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가 유지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D) 공공정책 사업 관련 비용은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 (E)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일반법, 세법 및 규제의 적용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법과 규제 면에서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기업의 법정 형태는 채권자들의 청구 압박 및 파산 절차 착수가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 (F) 공기업의 차입 및 채권 발행은 시장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비금융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관계는 오로지 상업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공기업은 특혜 금융, 세금 체납 또는 우대 무역 신용과 같은 간접적 재정 지원으로 인해 민간 경쟁자들보다 이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에너지, 물 또는 토지 등의 투입 자원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3. 공기업은 공기업 운영 조건을 감안하되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 (G) 공기업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조달 절차는 경쟁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적절한 투명성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24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시장 활동과 관련해 공평한 경쟁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적·정책적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기업과 국가 소유 기능의 분리, 공기업의 법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차별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 및 수익 구조에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민간 경쟁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와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공기업의 경제 활동은 상업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무역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한다.

2024 가이드라인 중 ‘시장에서의 공기업’ 파트의 주요 내용은 “국가 소유의 근거와 일관되

게, 공기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체계와 정책 프레임워크는 공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A.) 국가의 소유 기능은 공기업의 시장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국가 기능(특히 시장규제와 정책 결정 기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3.B.)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한 법적 중재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법적 형태는 공기업이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3.C.)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때,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3.C.1.) 비용 및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3.C.2.)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과 관련한 소비자는 보상금이 교차보조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배분 및 공시가 별도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 (3.D.)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다른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공공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조치를 할당하는 데 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수 있다.
 - 1) 지원 조치가 적용 가능한 경쟁 및 무역 규정과 일관되고,
 - 2) 지원 조치와 그 자금 조달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며,
 - 3) 지원 조치가 다른 영리사업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3.E.) 국가는 공기업의 경제활동을 법률, 규정 및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적용에서 면제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과 경쟁사 간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채 및 규제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3.F.)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차입 및 주식금융 등과 관련하여 시장과 일관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F.1.) 금융기관 간 관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모든 사업적 관계는 전적으로 상업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3.F.2.)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민간 경쟁사에 비해 경쟁상 이점을 주는 차입 및 금융 특혜, 보증, 관대한 세제 혜택, 기업 간 신용 우대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F.3.)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상품, 에너지, 물, 부동산, 데이터 접근권, 토지, 노동, 계약(예: 통행권 또는 양허권) 등과 같이 현물로 지급되는 투입물을 민간 경쟁사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F.4.)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유사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민간 경쟁사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지속 가능한 수익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 (3.G.) 공기업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공급자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적합한 청렴 및 투명성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 공기업과 그 잠재적 공급자 또는 경쟁자가 과도한 이점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H.) 공기업의 경제활동이 무역, 투자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업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수행해야 한다. 공기업은 책임 있는 기업 경영 기준과 높은 수준의 청렴성에 입각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024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법·규제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기업의 지원 조치가 시장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수행 관련 비용과 수익의 식별 가능성을 높여 공기업의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기업이 민간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OECD 경쟁중립성 툴킷 논의 동향

2024년 9월 OECD 경쟁위원회가 발표한 경쟁중립성 툴킷(Competitive neutrality toolkit)은 시장에서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1) 경쟁 정책 및 경쟁법 집행(제3장), 2) 규제 환경(제4장), 3) 공공조달(제5장), 4) 국가 지원(제6장), 5) 공공서비스 의무(제7장)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OECD 경쟁중립성 툴킷은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 왜곡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는 경쟁중립성 툴킷을 통해 경쟁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과 공공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중립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해 각국이 경쟁중립성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야별로 논의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쟁 정책 및 경쟁법 집행(제3장)

특정 시장 참여자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한 법적 체계를 다룬다.

경쟁법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과 근거를 법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쟁 정책 및 경쟁법 집행 관련 체크리스트

- 모든 기업(공기업 포함)이 경쟁법 및 합병 관련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지
- 경쟁당국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 특정 기업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방어 수단이 있는지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규제 환경(제4장)

규제 환경의 변화와 경쟁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룬다. 특히, 규제 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규제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또한, 특정 표준이나 규격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신규 진입자에게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규제 환경 관련 체크리스트

- 해당 규정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예외에 대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 파산 절차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시장은 규제 대상 기업과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지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공공조달(제5장)

공공조달 규칙 적용과 관련한 원칙과 사례를 다루고 있다. 공공조달 규칙은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장려하고, 특정 그룹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제품 표준을 요구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경쟁을 왜곡할 수 있기에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공조달 관련 체크리스트

- 공공조달 규칙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국영기업이 상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반 정부 부문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지
-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 모든 기업이 입찰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국가 지원(제6장)

국가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다룬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지원의 목적과 절차가 명확히 규명되고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대출 우대, 면세, 자본투자, 보증 등)은 반드시 시장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이를 통해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또한 지원 조치가 명확히 공개되고 특정 기업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종료 시점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 지원 관련 체크리스트

- 국가 지원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공개되었는지
- 특정 지원 조치가 경쟁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지
- 국영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지
- 모든 기업이 국가 지원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 지원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접근성을 제공하는지
- 국가 지원이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지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5) 공공서비스 의무(제7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 시 기존 사업자에게 물량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경쟁 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과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은 재정 지원이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공서비스 의무 관련 체크리스트

- 공공서비스 의무의 비용과 편익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연례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보고서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지
- 공공서비스 의무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업에 할당되는지
- 공공서비스 의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료: OECD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국경을 넘어서 기업 활동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장 여건하에서 공기업은 경쟁중립성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으며, 현재 당면한 과제는 경쟁중립성 툴킷에서 제시된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쟁중립성 툴킷의 내용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반영될지, 그리고 이를 한국의 공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 OECD Publishing, 2015.

_____, *Competitive Neutrality Toolkit: Promoting a Level Playing Field*, OECD Publishing, 2024.

_____,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2024.

김기중,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8. 12.

김영신,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2017. 7.

문종숙·조은혜, 「OECD 경쟁중립성 툴킷(Competition Neutrality Toolkits)」, 경쟁저널, 2024. 10.

박한준·강석훈, 『주요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지배구조 시리즈 17-02, 2017. 6.

성승태, 『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

신영수, 「공기업 참여시장에의 경쟁중립성 원칙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법학논고』, 제65집, 2019. 4.

AI와 저작권: 주요 쟁점과 국제적 대응 방향

인간의 창작 능력을 대체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2016년 3월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은 당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그 관심이란 과연 기계가 가장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다는 바둑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 일반인에게 인공지능(AI)은 우리 삶과는 아직 먼 신기술의 한 대상으로만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AI는 이제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작곡, 프로그램 코딩 등 과거 인간만의 특질이라고 생각됐던 창작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2022년 미국

[그림 1]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



장성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팀장







자료: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 결정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 예술대회에서 생성형 AI ‘Midjourney’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최고상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4월 한 지방 교육청이 실시한 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에서 AI가 만든 곡이 1위로 선정돼 충격을 주었다. 이를 심사한 유명 작곡가 역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생성형 AI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AI가 언어,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존 저작권 체계와 충돌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관련한 글로벌 저작권 쟁점

생성형 AI가 불러온 저작권 논쟁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AI 모델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 방식은 ‘합법적 이용’과 ‘무단 복제’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경우, 이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에서는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전히 인간 창작자가 저작권자라는 전통적 기준은 동일하나,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인간 개입이 존재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AI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1〉 주요 국가들의 AI 산출물에 대한 입장

구분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 입장
 미국	•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 보호,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 불가
 유럽연합(EU)	•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 가능
 한국	• 인간이 개입한 AI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가능, 단순 AI 생성물은 불가
 중국	• 일부 AI 생성 콘텐츠만 저작권 인정(‘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사례)
 일본	• 인간이 충분히 개입한 경우에 저작권 보호 가능
 영국	• 법률상 AI가 생성한 작품도 보호 가능하지만 적용 사례는 없음

자료: 저자 정리

AI 기업 · 산업계 vs 창작자 · 권리자, 극명한 입장 차이

AI와 저작권 문제 중 데이터 학습과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AI 기업 및 관련 산업계와 창작자 · 권리자 단체 등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AI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은 AI 모델이 ‘변형적 사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저작물을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나, EU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근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창작자와 권리자들은 저작권을 침해받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허락이나 동의 없이 AI 학습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창작 의도의 왜곡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자료로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명시적 허가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창작자 의도와 달리 원본 저작물이 이용되거나 변형되는 경우, 법적, 윤리적 위험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를 둘러싼 주요 저작권 분쟁과 소송

이러한 극단적 입장 차이는 결국 미국과 EU에서 여러 가지 소송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권 분쟁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이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스톡 이미지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인공지능 사진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개발사 스테이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최대 1조 8,0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하면서 게티이미지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자사가 30여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 1,2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 알려졌는데, 전 세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 SBS, MBC 지상파 3사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와 ‘하이퍼클로바 X(HyperCLOVA X)’의 학습에 방송사 뉴스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방송사 영상 ·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기준이 마련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 대표 사진



주: (좌) 원고 게티이미지가 제공하는 사진, (우) 스테이빌리티 AI의 생성형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 (게티이미지 워터마크까지 산출물에 포함됨)

자료: Getty Images의 소송장(<https://ia801604.us.archive.org/32/items/gov.uscourts.ded.81407/gov.uscourts.ded.81407.1.0.pdf>)

각국의 해법 찾기와 우리 정부의 노력

생성형 AI를 둘러싼 산업계와 창작자 측의 갈등 해결이나, 인간이 저작자라는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에서 AI가 도전하는 상황을 둘러싼 해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저작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정책적 대응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향후 다양한 판례와 법 개정,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도하는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준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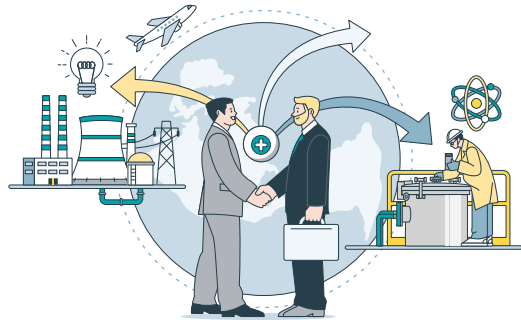
한국 정부 역시 AI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 정책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1년부터 AI 산출물의 보호와 책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매년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 그룹'을 운영하면서,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2024년 1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할 수 있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기술 발전에 따른 사진의 등장, TV와 비디오의 등장,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등 새로운 기술과 이로 인한 저작물 생산과 이용형태의 변화는 저작권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고, 제도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 생성형 AI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존 저작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앞당기는 루마니아·체코 수주 달성

추진 배경

- »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원전의 수출산업화'에 따른 원전수출 활동 강화
- (루마니아) 대규모 설비개선사업 및 압력관교체 공사 수주 추진
 - (체코) 팀코리아 일원으로 신규 원전사업 정비 분야 수주 추진



추진 내용

- »  루마니아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사업 계약체결 기반 마련



실적 확보(2009~2011년)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2009. 6.~2011. 6.)
 - 국내 동일노형 공사 경험을 통한 실적 확보
 - ※ 해당 공사 세계 유일 공기 준수



수주 활동(2022~2023년)

- 압력관 교체 공사(단독 사업 추진, 2022. 10.)
 - CE와 사업협력 회의, 압력관 교체공사 제의
-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사업 확대(2023. 7.)
 - KPS-한수원 협력합의서 체결



수주 확정(2024년)

- 공동제안서 제출(2024. 10.)
 - 최적 공사기간(33개월) 제시
 - 경제적 기법 활용한 적정 공사비 확보(약 5,000억원)
- 본계약 체결(2024. 12. 19.)
- 사업계약 합의(2024. 12. 30.)



사업 착수(2025년)

- 루마니아 사업 수행 준비
 - (인력) 고숙련 경력직 채용, 엔지니어링 교육 시행(CE, 캐나다)
 - (조직) 사업운영 총괄 및 시공 조직 신설
 - (자격) 현지 규제기관 인증 취득 등



»  체코 신규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 지원



한전KPS 자체 수주 활동

- 현지 상주 주재원 파견(2022. 10.~2023. 6.)
 - 현지업체 네트워크 강화 시행
- 국내 초청 정비체험 프로그램 진행(2024. 2.)
 - 체코 신규 원전 유관기관(4개사) 대상



팀코리아 인지도 제고

- 'Supplier Symposium' 참여(2022. 3.)
- '한국 원전과 첨단산업의 날' 행사 참여(2022. 6.)
- '한국 원전과 문화교류의 날' 행사 개최(2024. 6.)
- '한-체 원전 전 주기 협력 협약식' 개최(2024. 9.)



현지화율 만족 노력

- 현지화율 제고를 위한 MOU 체결(6건)
 - 기계, 전기 및 계측, 냉각탑, 수처리설비 등 4가지 분야(2022. 6.~)
 - 현지업체 지속 발굴 추진



경쟁력 있는 제안서 제출

- 시운전정비, 가동전검사, 수처리설비 운전 분야 제안가 산정·제출(2024. 4.)
 - 개정된 정비 분야 최종제안서 (인력, 정비품목, 교육 등) 작성

 **추진 성과**

» (루마니아) 압력관 교체 및 설비개선사업 수주 완료(5,000억원 규모)

- 대규모 압력관교체 및 설비개선공사 계약을 통한 한전KPS의 기술역량 입증
- 경제적 기법을 활용한 적절한 공사비 확보 및 최적 공사기간 제시

»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유럽 원전 진출 신호탄

- 발주사 요청에 따른 현지화율 제고, 경쟁력 있는 제안서 제출 및 팀코리아 적극 홍보활동을 통해 세계 원전강국(미국, 프랑스)과 경쟁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쾌거(2024. 7.)

 **향후 계획**

» 루마니아 설비개선사업 성공적 사업 수행과 추가 사업 개발

- (준비) 인력 양성, 조직구성, 품질인증 및 자격 확보 등 사업 착수 준비
- (수행) 국내외 발전설비 성능개선 수행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
- (활용) 유사 노형 발전소 설비개선 사업 추가 발굴, 수주 추진

» 체코 신규 원전 정비 분야 최종제안서 작성·제출을 통한 최종계약 체결

-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 체결(2025. 3.)을 위한 팀코리아 활동 계속 수행
- 사업 수주 성공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사업 추가 수주 추진



대한민국 연구 역량은 UP! 행정 부담은 DOWN! 국민을 위한 연구지원 플랫폼 구현

추진 배경

» 연구자의 행정 부담 가중으로 연구 몰입 저해

- 연구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발급, 감사 대비 자료 준비 등 행정 업무 과다

* 연구비 정산 시 관계기관 행정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발급·제출, 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종이 문서 생산·보관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별/기관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 낭비 발생

*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전국 380여개 대학/전문대학이 혜택 받는 전략사업

- 사업별/기관별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행·재정적 불편

◇ 표준절차 미비로 인한 개별 기관별 행정 및 예산 낭비


추진 내용

» 행정정보 연동을 통한 신속·간편·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 구현

- 연구비 집행 서류 제출을 위해 28만 과제의 연구자가 행정기관 시스템**에 개별 접속·검색하던 정보를 통합Ezbaro에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연계


* 2024년 기준, 정부 연구비 31조원 중 16개 부처 등의 약 11조원을 정산·관리하는 시스템

** 5개 부처·기관 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행정정보

 행정정보 검색


5개 기관 행정정보 연계·채널 일원화

간편 행정

 증빙 자동 연동

5개 기관 증빙 검색
→ 조회 내역을 선택해 자동 등록

신속 행정

 감사·정보공개

감사정보 요청에서 자료 수집·제공 까지 시스템 일원화

투명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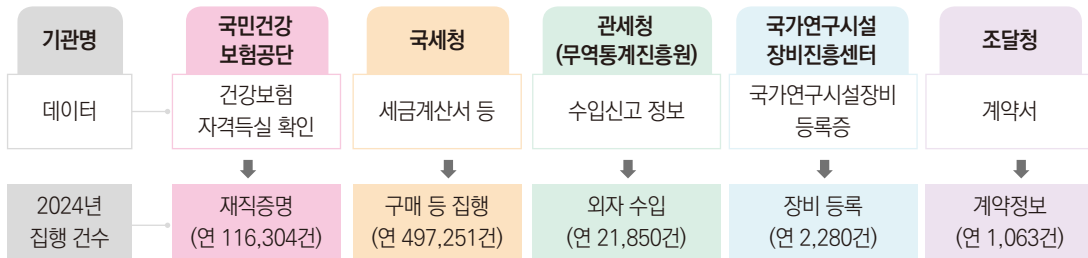
- 감사 증빙 자료 온라인 연계로 자료 신뢰도·간편성 제고, 투명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공개 추진

» 대학재정지원사업(약 4.3조원 규모) 관리시스템을 UniAll(University+All) 시스템으로 통합

- 380여개 대학이 수행하는 10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접수, 평가, 성과관리, 정산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
- 2조원 규모 17개 광역지자체의 산학연 협력사업에 서비스 무상 공유 (지자체 산학 협력사업 전문가 풀 부족 → UniAll 분야별 전문가 활용 서비스 제공 등)

추진 성과

» (통합Ezbaro 시스템) 5개 기관의 행정정보 연동을 통해 연구비 집행 서류 제출 약 64만건 행정 처리 간소화



- ◇ 증빙 자료 시스템 자동 연계로 대학 등 33개 기관 정산관리자,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약 25만명에게 행정 편의성 제공
 - ↳ 2025년 약 89만건 집행 예상으로 약 17만 시간 이상의 행정력, 약 1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UniAll 시스템) 사업별 시스템 통합 구축 및 대형 지자체 사업에 시스템 공유

- 사업별 시스템 구축과 유지비용의 중복 지출 방지로 매년 9억원 예산 절감
-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RISE 사업관리센터 대상 UniAll 기반 서비스 제공
- ◇ 전문가 6,700여명 제공으로 국책사업 성공적 안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약 800개 과제의 행정문서 114만장을 디지털 문서로 처리, 380개 대학의 사업관리, 정산으로 인한 출장, 서류 발송 행정 부담 해소

향후 계획

» 연구자 지원시스템의 행정·연구정보 연계 고도화, 대국민 정보 공유 추진

- (통합Ezbaro 시스템) 집행 증빙 데이터 상시 연계·관리 고도화, 투명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공개*
 - * 통합Ezbaro-NTIS 과제정보 연계 → 공개항목 협의 → 약 18만과제 집행내역 공개
- (UniAll 시스템) 대국민 사업정보 공개 및 활용 지원(홍보 강화)
- ◇ 지자체 대상 활용 설명회,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역 대학지원 사업 운영에 활용 지원(2025년 하반기) 등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을 들어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기존 ‘혁신도시 박람회’는 이번 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박람회’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지역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4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고졸 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분들께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CEO인터뷰

한국남부발전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박람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잡(JOB)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학력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주요 경력

2024.11~현재 한국남부발전 사장
2017~2020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3~201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기획조정실장
2012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
자원개발정책관
2009~2010 지식경제부 대변인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전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남부발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2001년 4월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되어 2011년 1월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발전공기업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의 국내 발전설비용량은 12GW로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칠레 등 해외에서도 약 3GW의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취임 후 대내적으로는 전국 9개 발전소의 살아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2025년 조직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분야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언론사, 협력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분들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진행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현재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산업계는 상충할 수 있는 2가지 상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AI산업, 데이터센터, 분야별 전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설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적인 측면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LNG발전소로 전환 중인데, 한국남부발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가 석탄발전소의 질서 있는 전환입니다. 한국남부발전 역시 현재 국내에 보유한 6GW의 석탄발전소 중 절반인 3GW를 2031년까지 친환경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0.5GW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합의가 완료되어 안동 지역에 건설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5GW에 대해서도 용인, 고양 창릉 등에 신규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입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중앙부처, 지자체, 협력기업, 발전공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여기서 도출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액션플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상생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기후변화를
지속 성장 위한 디딤돌로
여기는 인식 전환 필요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로 여겨지는데, 기관장으로서 갖고 계신 안전경영 철학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남부발전은 발전회사 중 가장 많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발전산업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발전소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설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들만 잘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종사하고 계시는 협력업체 직원분들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훈련,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지자체·소방서 협업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면서 재무건전성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고 판단되는데,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발전소 운영비용의 약 70%를 담당하는 연료비에 대한 변동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이전과 달리 급격하게 상승함과 동시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정책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친환경 최신 설비 도입 등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보는 관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무탄소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탄소산업 생태계의 선두주자(퍼스트무버)라는 이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뒷받침되었기에 한국남부발전이 청정수소 입찰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공기업이 생산한 전기는 정부가 전량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값싸고 질 좋은 연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남부발전은 해외에서 LNG를 직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야별로 집행한 비용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면서 실제 비용 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AI 기술 활용, 유관기관 협업 등 다각적인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분야 우수사

레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 조직을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제고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2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부채비율도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당기순이익 2,655억원 → 3,724억원, 부채비율 140.8% → 115.6%).

한국남부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추진하고,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개발하는 일은 발전공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만의 차별화된 2가지 핵심 사업 중 첫 번째는 국내 청정수소시장 선도입니다. 지난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국가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2037~2038년 수명이 종료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수소 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존 10차 계획에서 석탄발전소는 LNG로 전환한다는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수소 전소와 암모니아 혼소를 아우르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의 퍼스트무버가 되고자 지난 2021년 청정수소 전담 조직인 수소융합체를 발전회사 최초로 신설했고, 2023년 말에는 수소산업 전 가치사슬(밸류체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Up-stream(수소 개발/생산), Mid-stream(운송/저장), Down-stream(소비)을 총괄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체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밸류체인 단계별, 분야별 전문성을 키워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11월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인 우리나라 청정수소 사업 경쟁입찰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타 발전회사와 차별화되는 두 번째 핵심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의 우수한 LNG발전 경쟁력을 활용한 해외 선진 전력시장 진출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우리나라 최대의 LNG발전 사업자로 다양한 모델에 대한 건설 경험과 30년에 가까운 설비 운영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와 운전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한국남부발전은 국내 발전공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선진 전력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미국 1호 사업으로 미시간주에 건설한 나일스 LNG발전소(1,085MW)는 2022년 6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매년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35년간 매년 5억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미국 2호 사업인 오하이오주 트럼블 LNG발전소(953MW)는 현재 공정을



청정수소발전
퍼스트무버이자 글로벌
LNG발전 리더로 도약





소통을 통한 신뢰와 존중,
직원이 더 행복한
기업의 시작



80%를 기록하며 이상 없이 건설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장으로 취임한 후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한 가운데 미래성장본부 신설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성장본부는 LNG 복합발전의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올 6월 초에는 미국 진출 경험을 살려 'LNG 복합발전의 미국 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입니다.

취임사에서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셨는데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은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주말을 보낸 회사원 중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저 또한 회사 출근이 매일 즐겁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등등 각기 다른 사유로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에서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이유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는 회사 동료 사이에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사람이 당연히 승진하고 평가도 잘 받는 합리적인 회사,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식적인 회사,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청렴하고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속도는 느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직시절 제 별명이 '미스터 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격의 없이 토론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풀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도 해결되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주중 퇴근 이후 '1 hour 디너 미팅'을 하면서 직원들과 오프라인 소통 기회를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 사업소, 고참 직원, 신입사원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기관장과의 소통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 중입니다.

끝으로, 국민을 포함한 전력산업 이해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직원이 행복한 기업, 국민이 신뢰하는 기업,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깨끗한 기업,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지자체, 지역주민, 협력기업과 함께 호흡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현재와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수목원·정원의 미래를 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학력

공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 2024.8~현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 2024.1~2024.7 산림청 산림복지국 국장
- 2022~2023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장
- 2022.1~2022.7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 2020~2022 산림청 산림보호국 국장
- 2014~2020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산지관리과장
- 1991~2014 산림청 혁신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과, 산불방지과, 국유림관리과, 산림경영소득과 등



최근 수목원과 정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심상택입니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과 정원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갈망하는 시대에 수목원·정원은 우리 삶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도시를 빛내는 요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 생물자원 보전과 탄소흡수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단순히 휴식 공간을 뛰어넘어 자연 속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인 수목원과 정원 중에서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가 기후·식생대별로 조성한 국가수목원을 운영·관리하고, 정원산업 진흥, 정원문화 활성화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 국립정원문화원(전남 담양군, 공식 개원 5월 예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산림 생물자원부터 도심 생활권 식물자원과 자생식물의 보전, 정원 관광 및 문화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ESG 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ESG 사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의 조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 역시 단순히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며,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업들의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공공정원 조성, 환경보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관의 ESG 경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경영목표 K-ESG 지수 100점 달성을 위해 환경(E) 분야 활동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책임(S)과 투명경영(G)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4년 기준, 4년 연속 ‘대한민국 ESG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으며, ESG 경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기업과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비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조사·연구, 확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보유 식물종 1만종 확보를 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식물의 종자 확보와 저장기술 개발을 통해 생물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야생식물 저장 시설인 시드볼트를 활용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 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자 저장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해 산림 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지와 복원지 모니터링 조사로 산림 복원 확대와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고, 기후대별 자생식물 공급센터를 확대 운영해 산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태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작은키나무(관목)를 활용한 탄소흡수 기술과 도시숲 식재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와 기업 협력을 통한 보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민과학 모니터링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식물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협력해 구상나무 등 고산 침엽수 보전에도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은 과학적인 기술 개발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통해 지역상생을 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경북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추진하는 지역상생사업은 투입 대비 10배가 넘는 493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단순한 녹색공간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사업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사업으로, 수목원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식물을 공급받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의 재배역량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지역상생사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목원 인프라를 활용해 고품질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 자생 식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축제인 ‘봉자페스티벌’(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의 줄임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에 방문한 관람객 6만 2,570명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을 널리 알리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형 수목원의 특성을 반영해 ‘세록세록’ 브랜드 축제와 여름철 야간 개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해 연간 수십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과 협력한 교보재 제작 및 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수목원 내 플라마켓을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직문화는 구성원 역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조직문화 방향이 궁금합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조화를 이루되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기관 역량을 결집해 수목원 방문객 약 125만명 달성, 대한민국 ESG경영 대상 4년 연속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등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성장은 임직원 모두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립 8년 차를 맞는 2025년에는 직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 직원과 투명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기관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가치 아래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략적 접근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글로벌 환경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이행 및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산림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 가능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구사업 추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수목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체계를 고도화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전략을 정교화해 내재화하고, 성과관리 실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SG 경영을 정착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직원의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시설과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스마트 수목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자연을 품다 가치를 심다 행복을 잇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값이의 가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함께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이 되고자,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전시·관람·교육서비스의 활성화로 수목원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koagi.or.kr



지식재산 진흥·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편 —



손화정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식재산권 심사 행정을 종합 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로 설립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식재산 활용과 확산을 선도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식재산권 심사 행정을 종합 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로 시작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1년 7월,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청 심사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설립·운영되다가, 지식재산 종합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2022년 8월에 독립법인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개원했다. 2023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으며, 특허청에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를 지원하고, 민간에 특허정보의 ▲조사, ▲분석, ▲평가,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흥원 본사는 원활한 심사행정 지원을 위해 특허청이 있는 대전에 자리 잡고 있고, 국내 기업과 개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동교동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에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약 700명의 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들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바탕으로 진흥원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와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해 빠르고 정확한 특허 심사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특허성 및 기술정보 조사, IP(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특허평가(K-PEG) 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

1. 국내특허/국제출원/상표/디자인 선행기술 조사

국내와 국제에 출원된 특허·상표·디자인의 특허성 및 동일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의 존재 여부를 조사·분석해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특허 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 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2. 특허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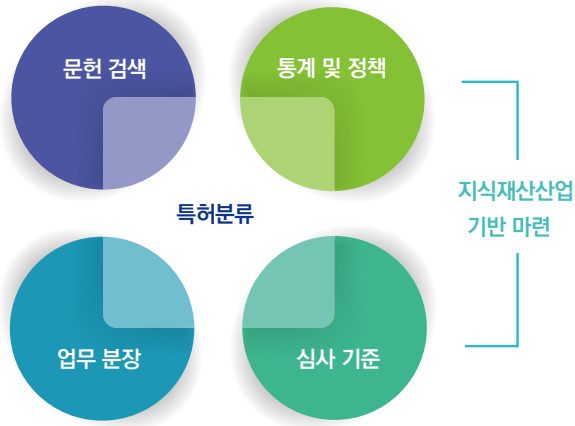
국내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그리고 PCT 국제특허 출원의 기술 내용을 파악해 해당 기술 분야별로 적합한 특허 분

그림 1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 결정 과정



자료: 기관 내부자료

그림 2 특허 분류 부여



특허 분류 개정 국제 업무 및 국내외 정책 연구

- 특허 분류 개정안 발굴 및 타청 개정안 분석·대응
- 특허 분류 국제회의 업무
- 한국 특허 분류체계 설계 및 운영
- 특허 분류 활용 방안 연구

효율적 특허 분류 업무 수행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IPC, CPC, FI/F-term 업데이트
- 특허 분류 전산지원 시스템 운영
- 특허 분류 관련 기준서 연구/업데이트 및 연구
- 타 분류체계 연계 연구

특허 분류 부여

- 신규 분류(국내출원/PCT). 기존 문헌 분류(CPC개정/표준문헌)
- 국가 핵심기술 분류 부여
- 국가 R&D 문헌 등 특허 외 문헌 분류 부여

자료: 기관 내부자료

류(CPC)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혁신 분류(KPC),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 분류체계(ESG)를 설계하고, 부여 중이다.

진흥원은 IP 기술 분류 종합서비스 운영을 통해 일반인이 IP 분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 정보를 제공한다.

3. 기업·개인 IP 정보분석 서비스

고객의 발명이나 아이디어 또는 출원 예정인 특허의 특허성 조사, 특정 분야에 대해 유사한 특허를 조사해 관련 특허동향과 기술동향을 파악해 주는 기술정보 조사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IP 컨설팅, IP 평가 등을 하는 민간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림 3 K-PEG 서비스



자료: 기관 내부자료

한-UAE 협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K-특허 심사

전 세계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의 자국 특허 심사를 한국이 맡아 추진하는 특허 심사 대행 사업을 진흥원 국제사업본부가 맡아 진행 중이다. 2014년 '한-UAE 실체 심사 대행 시행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약 26만달러 규모에서 시작, 2019년부터는 협력 범위를 확대해 신규 심사부터 최종 등록까지 아랍에미리트에 출원된 특허 심사 전 과정을 전담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에 약 232억원 상당의 외화 수익을 창출하며 글로벌한 K-특허 심사를 제공하는 특허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K-PEG(Korea Patent Evaluation & Granting) 특허평가시스템

국내 최초로 진흥원이 개발한 독자적 평가모델인 K-PEG 특허평가시스템은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딥러닝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특허유지율과 관련한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특허생존율에 대한 통계적 확률값을 계산해서 특허생존지수(PS)와 평가 등급을 부여해 기업이 보유 중인 대량의 특허를 신속히 선별·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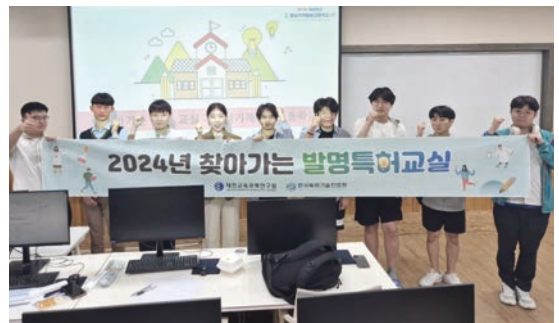
지식재산 재능 기부와 공공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

진흥원은 발명·특허 검색 분야의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과 충주 지역 학생들에게 발명·특허 분야의 진로 교육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발명특허교실'을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발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대전시와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생필품 전달, 하천정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정기 후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후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사진출처: 필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찾아가는 발명특허교실(사진출처: 필자)



시민실천운동 '함께하심'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등의 키트 전달(사진출처: 필자)



채용정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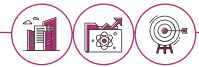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40년 이상 국내 방송사의 TV·라디오 광고 판매와 미디어·광고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온 공기업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를 근거로 설립됐고, '미디어로 세상을 이롭게 광고산업의 중심 kobaco'가 비전 슬로건입니다. 유일한 공영 미디어렐(media representative)으로서 지상파 방송광고 사업자 광고 판매 대행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익광고·광고교육 사업, 미디어·광고산업 진흥 연구/조사 사업, 디지털 혁신·IT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일반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 지역·학교·나이·성별 등 일체의 편견 요인을 전(全) 과정에서 배제하는 공정 채용을 실시합니다. 5급 신입직원 채용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전형, 건강검진 단계를 거치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팀 과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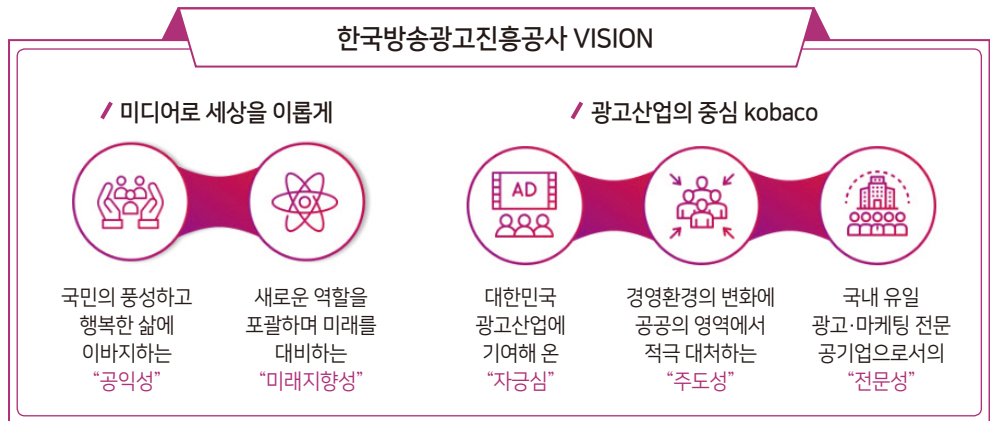
무엇보다 공사의 5대 인재상(윤리성, 전문성, 도전 정신, 고객 지향, 혁신 지향)과 지원자가 부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상의 직무기술서가 요구하는 지식·기술·태도 관련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해온 노력과 성과 등을 지원서에 녹여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 일원이 될 만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기술해 주시되, 본인만의 색채가 드러나는 경험이나 생각을 인상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행정(미디어·광고) 기준으로 PSAT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 관련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과 직무지식에 기반한 창의적·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IT 계열 직무의 필기시험은 일반행정과 동일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함께 객관식 전공시험으로 구성됩니다. 대체로 객관식 전공시험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IT 관련 직무로 입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전공 지식의 축적에 주력하셔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능력과 인성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자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공사의 이슈 관련 PT 능력, 직무 유관 경험의 표현력, 실무 상황 대처 능력,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인성 등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평가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실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타 공공기관 대비 인당 면접 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점 또한 미리 참고하시면 응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NCS·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른바 ‘스펙’ 같은 편견 요소와 무관한 공정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전과 수행 사업 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갖춰주신다면 공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상반기 내 올해 채용에 관한 대략적인 사전 안내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나갈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직자
인터뷰

광고로 세상을 이롭게



이현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2국 대리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업2국 영업1팀에 재직 중인 이현우 대리입니다. 영업국과 경영지원팀에서 약 4년간 근무했고, 지난해 9월부터 현 부서에 배치받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우리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공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MBC-TV 본사와 제주/춘천 MBC 및 YTN/종교 라디오의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체사와 협업해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광고회사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상품을 영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입사 전 방송사에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미디어랩의 존재를 알게 됐고, 공영방송의 판매 대행을 통해 미디어 업계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코바코에서 근무하고 싶어 지원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요?

방송사 근무 경력과 언론사 입사 준비 경험이 가장 도움 됐습니다. 공사 입사 전, 종합편성 채널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필기시험이나 면접에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일정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방송광고 영업 업무는 담당 매체사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광고회사와 부서 내 매체별 담당자들과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합니다. '방송' 특성상 복잡한 업무 상황 속에서도 우선 업무를 선정해 매일 매체사와 약속한 마감 시간에 맞춰 방송광고를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 직무이기 때문에 사내는 물론 외부 협업사의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원하는 결과인 매출 상승을 달성할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영업 업무의 가장 좋은 점은 지금 제가 하는 노력이 곧바로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보이는 실적으로 나타나기에 보람을 금세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 MBC나 종교 방송 등 공사 지원이 필요한 곳의 담당자로서 순간순간의 노력이 해당 매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영업 직무여서 매달 실적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중소 매체사가 실적 체크를 요청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부서 내 많은 선배와 함께 위기를 넘기면서 끈끈한 전우애를 느끼니 오히려 좋은 점으로 다가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입사 후 처음으로 담당한 광고주의 광고가 첫 전파를 타는 날, TV 앞에서 광고를 기다리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광고주는 한 중소기업이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제안서를 가지고 자그마한 회의실에서 대표님을 설득하고 논의했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길거리 매장에서 해당 제품 옆에 '재고 없음'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업무가 지루하고, 회사 분위기가 무겁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사고하는 선배님들이 많아 새로운 의견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연차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입사 전 품었던 생각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더 깊게 고민하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면접장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바늘구멍 같은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능력을 믿으세요. 나를 탈락시키러 온 저승사자 같아 보이는 면접관님도 사실은 누구보다 후배를 기다려온 선배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소개서 속 내용이 본인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점만 보여주시면 곧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길고 긴 암흑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합격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 경력들을 기록해 보곤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합격이라는 판단이 들면, 어느새 코바코에서 당당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채용정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참여 등을 통해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미디어 교육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사업, 미디어 역기능 대응 및 예방 사업,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공공성 증진 사업, 시청자를 위한 방송 안전망 구축 사업, 장애인 미디어 서비스 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재단 내규에도 채용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릅니다. 학력, 학교, 나이, 성별 등 지원자의 개인적인 배경 정보를 삭제하고, 오직 직무 능력과 역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신입 직군 채용 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로 서류 심사와 SI 역량검사를 실시하고 2차 실무 면접과 3차 최종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본 경력 사항인 학력, 전공, 사회경력, 기타 활동 등 이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입력 시 채용 취소 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문장으로 단순 나



배효순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지원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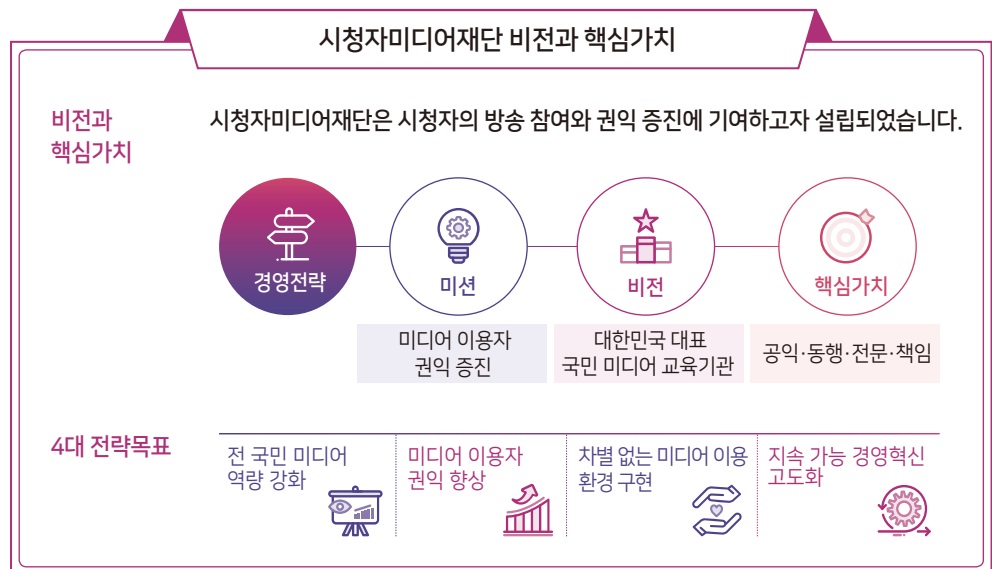
열한 정보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한 직무 관련 정보 위주로 핵심만 요약하는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채용 직무와 관련해 지원자가 보유한 경험과 강점을 활용해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삼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만의 강점을 차별화해 명확한 성과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면 좋습니다.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단은 필기시험 대신 AI 역량검사를 실시합니다. AI 역량검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원자의 역량, 성향, 의사결정 방식 등을 평가하는 검사 방식입니다. 게임, 영상면접, 자기보고식 검사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비교해 낯선 방식의 시험이니 사전에 많이 연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면접 전형은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접위원들이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초 답변에 이은 추가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수치, 성과 위주로 답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서 지원한다’는 목표와 의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채용 전 과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홈페이지, 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인턴십에 참여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등 재단 내부에서 업무를 경험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세상과 사람을 잇는 일! 미디어로 함께해요!



최민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 선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에서 근무 중인 최민영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본부를 여의도에 두고 있으며, 전국 12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약 5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본부에서 전국의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저는 미디어 교육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효과성 연구와 교재·교안 개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미디어 교육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근무 분위기는 어떤가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

는 직원이 많아 창의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제한적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부서 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미디어를 전공하며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에 관심을 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고민하던 중 재단 채용 공고를 접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찾기 쉽지 않은데, 전공을 살리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 된 경험은 무엇인가요?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디즈니월드에서 6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업무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얻은 자신감은 이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말해주세요.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잘 이해해야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점은 제 일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처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미디어 도구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는데,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미디어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어려운 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향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당시 백령도와 연평도 등 도서 지역에 자리 잡은 학교를 찾아가 일주일간 미디어 캠프를 운영한 경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섬 모습을 직접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교육이 끝난 뒤 “미디어 덕분에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참여자 소감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초기에는 선배들이 모든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제가 선배 위치에 서보니 여전히 미숙한 점이 많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입사 초기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도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어느 공기업이든 상관없이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공기업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분야에 지원하면 그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하면서 성취감을 얻기 어렵고 쉽게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자신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 준비 시절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후회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더 나은 도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지금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근을 시작하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경험들이 많으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대기만성’의 진짜 주인공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23년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고졸 채용 전형으로 입사해 현재 비축농산물 품질 관리 및 비축기지 냉동기계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석 응 주임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소기업 계약직이었던 제가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 수기를 공유하며 공공기관 고졸 채용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학생 때 결정한 공공기관 입사의 꿈

고등학교 입시 고민이 많았던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관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진행되는 선배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들으며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전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졸업 후 공공기관에 입사해 모교에서 취업 수기를 발표하는 선배들을 보며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꿈을 향한 노력, 그러나 다가온 좌절

이후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방과 후 NCS 특강 수업, 전공 관련 실습,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NCS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작인 9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에 지원을 시

작했습니다. 원하는 채용 직무가 기계직이었기에 2학년 때 복수전공으로 냉동기계를 선택했고, 공조냉동 안전관리, 냉동공학, 공기조화 이론을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용접 실습반에서 아세틸렌 용접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학교가 주관하는 직업기초능력 평가 모의고사에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 합격해도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취업에 먼저 성공해 하나둘씩 현장 실습이나 인턴 과정을 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초조해했습니다. 결국 졸업하기 전까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졸업 직전인 12월 말, 산학협력부 선생님의 권유로 타지에 있는 중소기업 반도체 세정액 생산공장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인생의 멘토, 아버지가 주신 지혜

졸업 직후인 1월, 반도체 세정액 생산공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공공기관 취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산량 증가 때문에 야근하는 날이 많아져 힘들 때는 아버지께 전화드려 조언을 구했는데, 아버지께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힘든 상황 속에 있음



석 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장성비축기지 주임

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계기가 됐고, 원래 목표였던 공공기관 취업에 다시 도전하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제가 매진해야 할 한 가지 목표인 공공기관 입사에 여러 번 발목이 잡혔던 필기 전형 합격을 위해서 그동안 응시했던 공공기관의 NCS 출제 유형과 그에 따른 점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듈형에 비해 공직적격성평가(PSAT)형 시험에서 점수가 낮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PSAT형을 보완하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을 실천했습니다.

또, 졸업하고 공부를 재개하며 제 단점인 PSAT형에 강해지기 위해 들인 습관이 한 가지 있다면, 뉴스 기사를 읽는 일입니다. NCS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언어이해력과 논리학적 사고력, 자료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입니다. 언어이해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자료 해석 능력과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출근길 자투리 시간에 오늘의 뉴스 기사를 정독하며 글 읽는 습관을 들이고, 국내 정세를 파악하며 지식과 견문을 넓혔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와 함께 찾아온 기회

노력이 통한 것인지, 첫 번째로 응시한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 전형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공공기관 면접인만큼,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장에서 얻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면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이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배운 직무능력을 다듬으며 다시 올 기회를 도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고, 2023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선배들의 취업 수기를 통해 알고 있던 기관이었고, 채용 직무도 제가 원하던 냉동·기계 직무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두 단계의 관문, 서류·필기 전형

고등학교에서 배운 3년의 경험과 공장에서 수행한 1년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냈고,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NCS 봉투 모의고사를 구매해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보며 필기시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필기 전형에서 합격점 대비 안정권인 성적을 받고 두 번째 필기 합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최종 고비, 면접 전형

마지막 전형은 상황 면접과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습니다. 상황 면접에서 주어진 상황은 보관 농산물의 출고와 관련한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세정액 생산 공장에서 일하며 배웠던 세정제품 출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관계서 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자기 개선의 결과, 최종 합격

“석 웅 님은 2023년도 하반기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 경영진 면접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 날 합격 문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
 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드디어 합격했다는 사
 실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꿈을 좇아 열심
 히 달려온 제 노력이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하셨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
 들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합격 후 부모님과 함
 께 양복점에 가서 임용식 때 입을 정장을 고르던 날
 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제가 가치관을 형성하
 고 발전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둔 명언입니다. 비록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단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매진하였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공공기관 고졸 채용 입사 성공을 꿈꾸는 수험
 생 새싹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제가 수험생 여
 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빈말이 아
 닐 수 없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
 시오. 어떤 이들은 한 번의 참담한 실패를 겪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
 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실패의 횡수를 중요하게 여
 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끊임
 없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발전하는 ‘자가 보완의 시
 간’입니다. 두 경우의 사람 중 후자라면, 노력의 결실
 이 맺힐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매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만이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이 글은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제한 것입니다.

스무 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재경영팀 양나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5개 공공기관에 도전해, 세 번의 필기시험 합격과 168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내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제가 이룬 쾌거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자기 발전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제가 걸어온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꿈을 당당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의 전환점이 되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당시, 친구 대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길을 걷고자 했지만, 친척분의 추천으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특성화고의 길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높은 취업률과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매력적인 제도를 알게 됐고, 기존 입시 경쟁보다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방향이 제게 더 맞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안정성과 사회적 기

여를 중요시하는 제게 고졸 자격으로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여상에 입학했고, 이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의 밑 작업, 자격과 경험을 탄탄히 쌓다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덕분에, 각 학년에 필요한 자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저학년 때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서류 합격을 목표로 회계, OA, 무역 등 다양한 분야 자격증 취득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회계 1급을 포함한 13개 회계·OA·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는 서류 심사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급회장과 학생회 활동을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경험은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업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어 전교 9등이라는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내 꿈 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나의 주장 대회에서 동상을,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은상을



양나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재경영팀 직원



받았고, 교외의 UCC 제작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성취감은 제게 도전 의식을 길러주었고, 스스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취업 특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연습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경험을 미리 정리하고, 성격의 장단점 등 기본적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둘 수 있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친구 4명과 스터디를 구성해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스터디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서로 피드백하며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고,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까지 다양한 유형의 면접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NCS 문제집 풀이에 집중해 PSAT 유형을 반복 학습하고, 모듈 유형의 이론을 철저히 암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필기와 면접 전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갈고 닦았습니다.

서류 전형,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뽐내다

서류 작성에서는 공기업 공고가 뜰 때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각 기업 홈페이지에서 인사말, 사업 내용, 인재상을 정리한 후 제 경험과 연결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합격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에, 생년월일, 자격증 합격일 등 기본 정보 입력을 완벽히 했습니다. 또한 항상 제출 전에는 주변인의 평가를 받아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는지 점검했습니다.

필기 전형, 7번의 실패와 3번의 성공을 맞보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경험 쌓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NCS 필기시험 준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필기시험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했기에 수많은 공기업 시험에 도전하며 7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3번의 소중한 합격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준비 초반에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시간이 촉박하기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판별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며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부분은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이에 시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선지의 마지막 번호부터 풀면서 답을 찾는 방식을 훈련했습니다. 이는 출제자가 풀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정답을 선지 후반부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인펜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략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면접 전형, 용기와 적극성으로 임하다

처음 면접에 합격하고 대졸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면접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고졸 전형과 일반 전형 사이에 차이가 있기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각자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을 작성해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각자 기업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조사해 기업 비전과 이슈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경험 면접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운반 방식과 같은 실제 기업과 관련한 토론 면접도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졸과 고졸의 차이를 의식하기보다는,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스터디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최종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성장과 정책 제언, 긴 글을 마치다

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입사한 후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공공기관 입사에 꼭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 채용 전형에 따른 차별 없는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제게 있어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복지였습니다. 인사팀이 수행한 인사 발령, 연차 유급휴가 촉진, 근태 점검, 교대근무 및 대체근무 관리 등의 업무는 제가 공단 일원으로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승진, 진학 지원 등 사내 규정으로 확립된 제도와 차별 없는 조직문화는 제가 앞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공단이 제공하는 ‘국내 대학위탁교육 제도’를 활용해 ‘선 취업 후 진학’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는 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공단이 저

를 믿고 지원해 준 만큼, 입사 과정에서처럼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매진하여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경험을 바탕으로, 고졸 채용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졸 채용자를 위한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꼭 진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을 선택한 고졸 입사자들은 학업 열망이 많은 편이기에, 자격 취득 지원, 실무교육, 이러닝 등을 통해 이들이 업무와 학습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둘째, 2023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을 통해 정보 습득 창구가 더 확대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졸자에 비해 고졸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배 수도 부족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람회와 같은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고졸 채용이라는 기회를 잡아서 공공기관 입사의 꿈을 이루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기반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

모집기간: 2025.2.6.(목)~2025.4.24.(목)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 딱 맞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 2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 내외 선정 및 5년간 최대 45억원 지원!



협약 참여 주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육청

• 조례 제정 및 제도 지원 • 교원 임용 및 교육과정 개발 • 예산 지원

지자체

• 교육발전특구 사업 연계 •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지역 정주 지원

기업

• 졸업생 채용 • 교육과정 공동 개발 운영 • 교원 연수, 산학겸임교사 파견 등

대학 및 기관

• 후학습 트랙 개설 •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 지역 수요 분석 및 취업 지원

논문 모집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y Review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논문 투고 안내

논문모집 공고는 매년 1월, 6월 중 게시

세부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www.kipf.re.kr/soe/)

기고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의 정부정책(기능·사업)과 운영(지배구조·인사·조직·재무
회계·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분야

기고자 자격 및 원고 작성 방법

기고 자격 : 제한 없음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15매 내외)

편집 양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지사항 내 논문모집공고 확인

(www.kipf.re.kr/soe/)

* 별도의 심사료, 게재료 없음

논문 발간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간)

기고 방법 및 원고료

kipf@kipf.re.kr 메일로 기한 내 논문 기고 및 문의

게재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 원고료 지급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Tel : 044-414-2423 E-mail : kipf@kipf.re.kr



“생수병 짬이야...”

비상구 적치물은 대피 시간을 최대 50% 지연시키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 사망자 전체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사소한 짐이 위급상황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비상구 앞을 깨끗이 비워주세요.